

한국 부패사 연구: 해방 후 미군정 시기 통치기구 형성과 경찰 활동의 功 過를 중심

Study on History of Corruption: focused on the Government formation
and Function of the Korean Police Activities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or regimes after liberation.(1945-1948)

김 택(Kim, Taek)*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police function, roles, and activities under U.S Military regimes in 1945-1948. This study explores police merits and demerits, corruption during the Military Governor system.

This Paper cast lights on the Effects of the Korean police activities under U.S. army that have influences and powers. In 1945, Korean peninsula was liberated by the U.S and Soviet. But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due to the great powers. South Korea governed by U.S Military and North Korea had ruled by the Soviet Communist. This study analyses structures and function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theoretical factors and secondary analysis. And that analyzes historical theory.

This paper contents and research data were analyzed by the historical and empirical data. Key points the author emphasizes are as follows:

First, to introduce the cases of establishing Korean government formation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or regimes,

Second, to analyze each role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Police System and roles,

Third, to understand the current historical evaluation, in other words function and eufunction and remaining effect of police negative activities.

This paper contributed to solve a problem limitation that have negative and positive focus factors. And this paper proposed appropriate suggestion policy to the Korean police future and strategies of development related to historical righteousness.

As a result, This paper improves Korean Government and police system, so it must overcome negative image and difficulties through scrutinizing analysis.

Key Words: Korean Government, U.S Military Governor regimes, Police activities, Negative factors,
Police History of Corruption

I. 서론

1. 연구목적

*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 경찰사는 한국사의 범주에 속하는 특수라고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성장과정 속에서 경찰제도의 발전과정을 학문적으로 추구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역사의 연구를 통하여 그 속에서 시대적인 각자성과 특수성을 보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서 일관하여 흐르는 일반성과 법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반추하여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그 시대의 모순과 불합리를 인식하고 발전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군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국경찰은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할 중요한 시기였으나 정치 권력층의 하부집단으로서 충성하는 데 급급한 한국 경찰사의 오점으로 남았다. 즉, 정치적 예측화의 가중, 정치권력의 하부기능으로서 만족해야 하는 취약점을 노정하였다는데 문제점이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다.(한국경찰사,2002:249) 역사의 고찰은 항상 시대구분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시대구분이 어떻게 되는가는 역사를 인식하는 태도 내지 방법을 의미하고 경찰사에서도 적용된다고 본다.(이기백,1990:6)

우리나라는 45년 해방과 더불어 제국주의적 일제 경찰 제도를 벗어나는 계기를 맞이하는 시대였지만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일제경찰의 잔재가 그대로 계승되었고 그 후 남북분단의 고착화, 냉전체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그 잔재가 투영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일본의 미군정기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사법체제,정치체제까지 개혁되고 청산절차를 밝아나가는 것과는 대조된다는 점에서 한국경찰의 혁신은 요원하다고 본다.(한국경찰사,2002:191)

본 연구는 2차 대전 이후 한반도에 대한 미소의 군정기 동안 (1945-48) 통치기구 형성과 치안정책과 활동 기능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남한의 미군정기 동안 경찰활동의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경찰기능의 공과를 살펴보는 것은 국립경찰형성에 있어 과오를 반성하고 민주경찰로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군정기 시 통치기구의 성립과 활동을 고찰하고자 하며 경찰의 활동 등을 평가하여 경찰사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i) 미군정기 통치기구 성립과 활동을 고증하고 ii) 미군정의 경찰의 부정적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iii) 경찰의 치안활동 및 정치적 예측화 문제점을 평가하고, iv) 오늘날 국립경찰, 민주경찰로서의 한국경찰의 방향과 평가가 무엇인지를 도출한다.

2. 선행연구

1) 국내연구

미 군정기 경찰연구는 여러 학자들이 분석하였는데 먼저 김영명(1998),강혜경(2002) 등은 경찰정책과 역할을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안진(2005) 등은 해방 전후의 혼란속에

서 경찰의 역기능적인 활동과 경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방향과 비판을 제시하였다.

첫째, 안진(2005)은 군정경찰의 역할과 활동을 통해 군정경찰의 특징을 지적하였는데 먼저, 군정경찰은 최대의 물리적 강제력을 갖는 억압기구라는 점이고, 조직면에서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강하며 조직의 과정이 하향적이라는 점이다. 군정경찰은 해방 후 각 지역에서 조직된 자치적 치안조직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고 위로부터 하향적으로 조직되었다고 한다. 안진은 군정경찰의 전투경찰로서의 군사적 특성과 함께 그것의 정치화가 주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군정경찰기구의 대행자들의 내적 응집성과 동질성을 주된 특징으로 들 수 있다면서, 군정경찰은 단순한 기술관료 집단이 아니라 친일경력이라는 동일한 배경과 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파벌이 많았던 군(조선경비대)과 매우 대조적이다 라고 주장하였다.(안진,2011:205-206)

둘째, 강혜경(2002)은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경찰조직과 중앙집권화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경찰통계연보를 통해 경찰형성 작업을 분석하였는데 미 국무성이 작성한 외교문서를 통해 당시의 경찰자료의 한계와 부정확성을 보충하였다. 특히 미군정 경찰의 좌익무력화와 우익주도 국가수립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군정 경찰세력들이 자신들의 주요 역할을 정치 불안을 야기시키는 좌익세력의 제거에 뒤편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보았다.(강혜경,2002:14)

셋째, 김창윤(2009)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정 치안정책을 비교 연구하였다. 김창윤은 미군정기 한국과 연합국사령부의 일본강점기의 치안정책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양국간의 치안정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치안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미군정의 장기적인 정치적 요인을 평가하였다.(김창윤,2009:39면)

2) 해외연구

서구학자로서 미군정기 경찰 성립 과정을 연구한 커밍스 교수는 미국정부의 해방 전후의 한국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한국사라든지 경찰사에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에서 1945년부터 1947년까지 한국전쟁의 반발전 내용, 혼란상황, 경찰수립,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법기구와 경찰기구의 재편을 설명하면서 한국 국립경찰의 역기능적인 측면, 친일 경찰의 등장을 지적하였다. 그는 남한에서 좌익 조직들이 쇠퇴하게 된 주된 요인은 국립경찰의 우월한 조직력 및 기술적 능력이라고 보았고 국립경찰이 전체주의적 시각에서 위압적이며 고도로 집결된 조직이 정치조직이나 각종의 중간기구들을 분쇄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중을 꿈쩍 못하게 하였다고 비판하였다.(브루스 커밍스,2001:225)

그러나 미군정기 경찰연구에 관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공과를 정확하

게 직시한 종합적인 분석은 없다. 경찰의 치안정책 수행과 정치적 중립성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이 문제는 논란이 많을 수 있다. 미국 군정기 경찰작용 연구는 공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역사적 해석은 양론이 있고 또 이를 연구하는 역사가의 임무라고 볼 수 있지만 행정학자들의 정책실패에 관한 진지한 판단도 중요하다고 본다.

3. 분석 틀

이 글에서 미군정 경찰의 작용에 대한 공과와 기능을 규명하고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군정의 사회적 상황과 환경을 분석한다. 독립경찰 수립 상황을 설명하고 일제경찰들이 이 과정에서 다시 수용되어가는 과정을 밝힌다. 미군정 당국의 치안유지기능을 위해 이들과 협력하는 수단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두 번째, 경찰이 해방 전후 미군정시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예측하고 정치권력과 합작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대구 사건, 제주사건, 각종 선거개입을 통해 경찰은 어떤 대가를 노렸고 어떻게 대중에 투영되었는지 분석한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경찰기능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평가하고 한국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순기능과 역기능의 평가기준은 미군정 당시의 경찰 활동의 공과, 치안정책의 판단과 오류에 국한한다. 즉 당시 경찰의 사회질서 확보 차원에서의 과도한 법집행의 문제점, 경찰권의 남용 등이 현재 경찰이 체화하여야 할 봉사 헌신, 민주경찰상과의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당시의 문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이나, 국가기록 관련서류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경찰통계 자료도 중요한 자료라고 본다. 또한 역사 관련 자료도 좌우의 이념적 논쟁의 소지를 넘어 냉철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경찰작용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당시의 언론 보도는 본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해외학자들의 시각과 이론들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든지, ‘한국사’, ‘한국전쟁사’ 등을 분석하였다.

당시 해방정국은 이념대립, 좌우합작, 미소의 한반도 진출과 군정 등으로 사회 혼란과 체제 미확립 등 국가체제나 정치체제가 정립되질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기의 독립경찰의 정책과 정책수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헌과 통계 그리고 해

외학자들의 주장과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립 경찰이 태동할 시점에서 경찰의 기능과 활동이 왜 정치적으로 예측되고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당시 한반도 남한지역에서 발생한 민중봉기나 정치선거 등에 있어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탄압이 당시 정치 상황이라든지 미 군정당국의 경찰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도 문헌연구를 통해 논리적 추론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결과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므로 당시의 사건의 인과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언론 보도 자료를 분석 인용하였다. 경찰의 치안정책과 법집행은 당시의 시대 상황이 현재와 다르겠지만 봉사 민주경찰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오늘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비판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미군정의 통치기구

1 미군정 주둔과정

1945년에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 양 강대국에 의해 한국민이 원치도 않고 또 관여하지도 못한 채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굴레를 강요당해야 했다.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이 미태평양지역 총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의 대리인인 미사령관 하지(John R. Hodge)중장에게 항복한 순간부터 남한지역은 미국의 군정하에 들어갔으며, 소련은 일본의 패망이 거의 확실해진 1945년 8월 9일에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한·소 국경을 넘어 한반도로 진입하더니 일본이 항복을 한 뒤에도 계속 진군하여 평양·함흥 등 북한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해 나갔다. 이로써 한반도는 미군정하의 남한지역과 소련군 점령하의 북한지역으로 분단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반도의 국토분단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민족자주적인 국토통일의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심화됨에 따라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유엔의 결의에 의해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1948년 8월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유종해·김택, 2008:331-340)

2. 해방과 미군정의 성립(총무처, 1980:89-90)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한국은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우리 한민족은 이 해방이 곧 독립을 의미하는 것

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심한 압제로부터의 돌연한 해방은 우리 민족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데 큰 혼란을 가져왔다. 즉 외부세력에 의하여 조선총독부라는 식민지 통치체제가 우리들에게서 한번에 벗겨졌으므로 사실상 하나의 무정부적 혼란을 가져왔다.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식민지 통치체제를 분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새로 이어진 통치체제에 대한 선택의 준비를 갖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당시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길이 있었다. 그 하나는 1919년 이래 독립운동을 주도하여 오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총독부의 통치기구를 인수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 거류하고 있던 독립투사들에게 총독부를 인수케 하여 과도정부를 형성케 하는 길이 있었다. 따라서 국내의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 견해로 갈라져 있었다. 즉, 임시정부가 곧 귀국하여 정권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는 송진우 계통과 연합군이 진주할 때까지 민족대표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운형 계통으로 행동이 갈라진 것이다.

송진우 계통이 임시정부의 귀국을 기다리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여운형 계통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 건국준비위원회였다. 당시 송진우 계통은 건준이 총독부로부터 직접 정권을 인수받으려 한 것과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에 대하여 건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였다. 즉 송진우는 정권인수는 패망한 일제로부터 인수해서는 안 되고 일제를 패망케 한 연합군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하며 임시정부를 절대로 지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건준과의 합작을 거부하였다.

건준에는 일부 민족주의자도 가담하였으나 공산주의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처음 가담하였던 안재홍 등 민족주의자들이 건준에서 탈퇴하기에 이르렀으며, 남아 있던 좌익세력은 인민공화국이라는 일종의 정부조직을 서둘러 만들어서 임시정부와 대립하려는 기세를 취하였다. 이에 민족주의자들은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국민총회의 집결을 위하여 국민대회 준 지회를 개최하여 건준과 맞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이 날카로워져 가고 있을 때 미·소 양군이 각기 진주하였다. 먼저 진주한 것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소련군이였다. 소련은 일본의 패망이 거의 확실하여진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하여 한·소 국경을 넘어오더니 일본이 항복한 뒤에 계속 진군하여 평양, 함흥 등 북한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였다. 미군은 9월 9일에야 비로소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에 들어오고 남한 일대에 주둔하였다. 북한 38도선을 경계로 삼아 남북으로 갈라서 점령한 미·소 양군은 점령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은 처음에 조만식 등 민족주의자까지 포함하는 독립운동자들을 중심으로 소위 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소련 군정하의 행정을 담당케 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조만식을 위시한 많은 민족주의자들을 축출한 뒤 공산주의 정치를 실시하였다.

한편 뒤늦게 남한으로 진주한 미군도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한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였다. 군정청은 소위 인민공화국은 물론 대한민국임시정부까지도 한국의 주권 행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정을 담당한 미군은 한국에 대한 이렇다 할 예비지식

이 없었으므로 민족적인 요망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북한과는 달리 정치적 자유가 허락되었으므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혼란만이 야기되었다. 미군측이 한국의 진정한 주권 독립에 대하여 좀더 깊이 고려한 바가 있었다면 조선총독부 이후에 올 통치기구가 결코 단순한 서구적 통치기관의 모방에 그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유종해 · 김택, 2008:331-340)

3. 미군정하의 행정기구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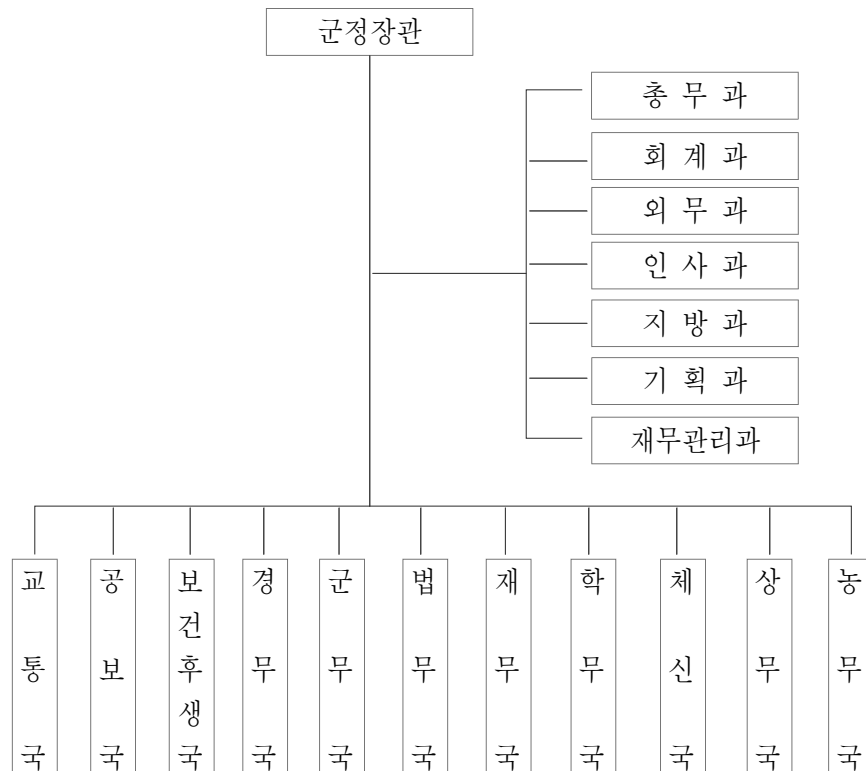
해방 후 9월 9일 한반도에 진출한 미국군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약 12만 명의 일본군을 무장해제하였다. 정식 항복을 접수하자 한국민의 희망을 저버리고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은 현재 독립이 곤란하고,

② 한국사회의 혼란상태가 진정될 때까지 아베 노부유키(하부신행) 총독을 비롯한 일본 식민관료를 당분간 잔류시킨다고 선언하였으며, 행정관리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인의 충원을 거부하고 일제식민지 관리를 그대로 잔류시켰으며 또 행정기구도 총독부의 기구를 답습하였다. 그러다가 한국의 민심이 비등하여지고 총사령부의 압력을 받아 군정 실시가 결정되었다.

9월 12일 하지는 아베 총독을 해임하고 아놀드(Archbold B. Arnold) 소장을 군정장관에 임명하는 동시에 경무국장에 슈익크 대령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14일에는 총독부의 각 국, 과의 사무를 인수하였으며, 15일에는 미군의 각 국장이 임명 발표되었다. 최초의 군정부기구는 관방에 총무 · 외무 · 인사 · 기획 · 회계 · 지방 · 재무관리의 7과를 두었으며, 집행기관으로 경무 · 외무 · 광공 · 학무 · 농상공 · 법무 · 체신 · 교통의 8국을 두었다.(표2-1 참조) 그 뒤 보건후생국 · 군무국 · 공무국이 신설됐다. 미군정은 미군정이 실시된 후에도 총독부 행정기구를 존치시켰다. 또한 한국의 일본인 직원을 해임하였다. 그리고 ‘행정고문’이라는 이름 아래 미군 장교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케 하고 각 행정기구 내에 한국인들을 임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미군전은 10월 5일 군정청고문관으로 김성수 · 전용후 · 김동원 등 11명을 임명하고 자문을 구하였고 12월에는 일부 고문관들이 행정부처에 임명되어 고문관의 존재의의를 잃었고 추후 이 제도는 폐지되고 말았다.

표2-1 해방후 미군정 조직도



출처: 유중해·김택(2008), 한국행정사 참조

1946년 3월 군정청은 중앙집행부서의 국제를 부제로 개정하였다. 즉 학무국을 문교부로, 법무부를 사법부로, 교통국을 운수부로, 군무국을 국방부로 개편하고, 경무국·농무국·상무국·재무국·체신국·보건후생국을 각각 부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토목부와 노동부를 신설하여 13부를 구성하였다. 또 관방의 7과를 인사행정처·지방행정처·식량행정처·물가행정처·관재처·외무처·서무처로 승격 개편되었다. 이에 앞서 동년 1월 14일 군무국 예하에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으며, 군무국이 국방부로 개칭된 것에 대하여 그 당시 진행되고 있던 제일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측 대표가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국방부란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항의함으로써 국방부를 국내경비부로 다시 개칭하였으나 한국측에서는 이를 통위부라고 불렀다.

그 후 다시 기구가 변경되어 지방행정처가 폐지되고 재무부의 세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교부의 기능 강화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구의 변화는 결코 체제의 대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총독부의 기구를 다소 개조 혹은 확장을 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통치수법에 있어서도 총독부의 그것과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만 총독부가 점진적으로 독재를 강화하여 갔다면 군정은 반대로 독재를 약화시켜 갔다고 할 수 있다. 미군정에 있어서 지방행정기구는 대체로 총독부 기구를 확대시켜서 거의 미국식 지방행정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지방행정은 어디까지나 광대한 지방구역을 전제로 해서만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같은 협

소한 지방구역에는 맞지 않는 제도였다. 그런 연유로 군정의 지방행정 기구는 결코 우리에게 이익과 발전을 가져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유종해·김택, 2008:331-340)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로 들어간 이후 군정 당국은 김규식·여운형 등 온건한 좌우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좌우 합작운동을 시도케 하여 이를 알선하는 한편 동년 6월 러치(Lerch)군정장관은 한인이 요구하는 법령을 한인의 손으로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창설을 하지중장에게 건의하고, 7월 하지의 승인을 얻어 8월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창설을 발표하였다.

입법위원은 관선의원 45명과 민선의원 45명으로 구성되어 12월 12일 개원되었는데 이로써 한국 근대사상 최초의 근대적 민주주의 정치기구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 입법위원에서 제정된 법령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회와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1946년 12월에 개원하여 1948년 5월 해원되기까지 입법위원에서 제정 공포된 법률이 11건, 심의한 법률이 50여건이었으며, 입의를 거치지 않고 군종법령으로 공포된 것이 80건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입법위원은 입법부로서의 준비 단계의 임무를 수행한 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입법위원의 창설로 미군정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의 통치기관이 성립된 셈이었다.

1946년 9월 미군정하의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겠다는 러치(Lerch) 군정장관의 발표가 있었고, 1947년 6월 군정법령 제141호로 38선 이남의 입법·행정·사법의 미군정 한국인 기관을 남조선과도정부라고 호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권은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인 고문에게 있었다. 과도정부는 기구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적인 기구개혁안을 작성 실시하였다. 이 기구 개혁은 종래의 13부 6처를 13부 1특별국으로 폐합하고 인사위원회와 중앙경제위원회를 두고 중앙경제위원회 속에 물가·식량의 두 행정처를 두었다. 이 기구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 존속되었던 미군정의 최후의 기구였다.(유종해·김택, 2008:331-340)

Ⅲ. 미군정기 경찰형성과정

한국 현대사에서 미 군정기는 미 육군 제24군단이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포고에 따라 1945년 9월 8일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청)을 수립한 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까지 남한을 통치했던 시기를 의미한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존 하지(John R. Hodge) 중장 휘하의 제24군단이 맥아더의 명령에 의해 38도선 이남의 점령군으로 결정됐다. 제24군단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자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9월 7일자 포고 제1

호에 따라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미군정청)을 수립했다.

미군정은 해방 이후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친일파의 등용과 각종 제도의 수립, 이데올로기의 문제 등 미 군정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2013)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하고 한반도는 8.15광복을 맞았다. 여운형 등은 건국동맹을 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8월 말까지 건국준비위원회는 지방 세력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에 145개 지부를 두게 되었다. 9월 7일 인천항에 진주한 미군은 포고령을 통해 조선 인민 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을 부정하였으며 이에 얼마 가지 않아 조선 인민 공화국은 와해되었다. 미군정은 9월 9일 서울로 진주하였으며,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 받았다.(앤하위키미러,2013)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될 일이 수없이 많지만, 그중 핵심이 경찰이었다. 미군정도 경찰력으로 지탱해 왔고, 대한민국 정부도 다른 무엇보다 경찰력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8월 7일 대한민국 내무장관 윤치영과 과도정부 경무부장 조병옥이 공동 담화를 발표한 것도 경찰권 이양의 중요성 때문이었다.(김기협,2013)

“군정 이양을 계기로 하여 경찰권의 이양에 따르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의한 경찰 행정의 이속 및 경찰의 재편 문제가 박두한 사실 및 정부 수립 직후의 치안 유지의 완벽을 기할 필요성에 비추어 경찰권 이양 및 재편에 관한 경무부의 헌책을 내무부의 자료로 남조선 과도정부 경무부장 조병옥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게 제출하기로 공식으로 요청하였던 바 이 대통령은 자기 자신, 내무부 장관 윤치영 및 법무부 장관 이인 양씨를 위원으로 하여 경무부장 및 경무부 차장과 6일 오후3시 대통령실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경무부 개편안을 심사한 바 대체로 경무부 안을 채택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앞으로 경찰의 기구 및 인사 문제에 있어서 급격한 변동이 없어야 할 것으로 결론을 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은 내무부 장관 및 경무부장의 공동 담화로써 발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경향신문,1948) 조병옥이 아직도 칼자루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미군정 경무부장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대통령 이하 대한민국 측은 이에 응해 내무부 장관이 공동 담화에 나섰다.

표3-1,미군정기 경찰정책

	시기	치안정책 내용
미군정	치안제도 도입기 (미군정초기-1946.3)	직접통치체제 구축정책 중앙집권적 치안체제 구축정책
	치안제도 성장기 (1946.4-1947.8)	우익단체의 치안보조화 정책 공산당제거정책
	치안제도 확립기 (1947.9-1948.8)	치안기구 확대정책 치안보조세력 확대정책

자료 출처: 김창윤, 앞의책, 63면 재인용

1948년 서울신문에는 과도 정부 요인들이 지금까지 맡아 온 역할을 회고하고 새 정부에 당부하는 말을 모아 실었다. 그중 조병옥의 새 정부에 대한 당부는 다음과 같다." 신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대한민국의 일부 영토가 상실된 채 또는 천만에 가까운 동포가 총선거에 참가치 못한 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함은 결국 현 국제적 정세에 제약되어 남북 통일을 바랄 수 없는 비참한 민족적 운명에 직면한 조선 민족이 남북 통일을 꾀하고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려는 초비상적 대치인 것을 인식하여야 된다. 이 조치의 결실은 안으로 국력을 육성하고 밖으로 국제 여론을 환기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방해하는 국제적 요소를 대한의 정의 앞에 굴복시키는데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신정부는 반드시 강력한 정부라야 한다. 정부의 수립과 북한 공산 계열의 음모에 기한 소위 8·25 총선거를 계기로 하여 남조선의 치안은 극도로 우려되는 바이다. 요컨대 현 정부는 태평천하의 정부가 아니다 남조선의 사태는 정상적이 아닌 것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정부는 강력한 경찰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데 착안하기를 바란다. 중앙 집권제의 현 국립경찰 제도를 인계함에 있어서 그 조직 그 인사에 있어서 격변함이 없는 경찰 행정을 바란다." (서울신문, 1948) 일제의 식민 정책으로 이루어진 일제의 경찰제도가 만 3년 전 8·15를 분수령으로 허물어져간 후 과도적이지만 우리 국립경찰이 수립되어 혼란된 해방 3년의 치안유지의 업적은 소홀히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때로는 폭탄을 무릅쓰고 사선을 돌파하여 가며 혼란을 수습한 것은 약간 탈선은 있다 하더라도 그 공적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해방 이래 국립 경찰이 수립된 후 1945년부터 작8월 15일 내무부에 이양할 때까지의 수도청에서 취급한 검거 통계를 살펴보면 포고령 위반이 수위를 점하고 있으며 검거자의 중요한 것만도 다음과 같다.

△내란죄 83명 △포고령 위반 1만3395명 △군정 법령 위반 2657명 △소요죄 10명 △선거법 위반 156명 △불법 체포 350명 △폭행죄 177명 △살인죄 345명 △방화죄 47명 △통화 위조 25명 △주거 침입죄 176명 △사기 공갈 93명 △절도 19명 △강도 15명 △행정령 제1호 위반 19명 △기타 1141명으로 총인원 1만9000명의 불순분자를 검거하여 치안 유지의 공헌을 남기고 신정부에 이관하게 되었다.

‘포고령 위반’과 ‘군정법령 위반’ 중에도 경제 사범 등 일반 범죄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치안범이다. 이 두 항목이 전체 검거자의 80퍼센트 이상을 점하는 데 주거 침입 176명, 사기 공갈 93명 등 민생사범 수가 너무 적은 것을 보며 남조선에 왜 그렇게 많은 경찰이 필요했는지, 그 많은 경찰이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김기협, 2013)

IV. 미군정 당시 경찰의 역할과 부패사

1. 긍정적 기능

1) 경찰의 수사권

미군정을 실시하기 전에는 검찰은 기소와 수사권을 갖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미군정 후 1945년 12월 29일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에 의해서 검사의 기본임무는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다. 범죄조사는 검사의 직무가 아니고 경무국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경무국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었다.(최신우, 2013:164)

또한 서장의 즉결처분권이나 훈방권의 사법기관 이관 등을 통해 경찰 수사권을 조정하였다.

2) 경찰체제의 확립

미군정하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법규정은 폐지하였다. 미군정법 제11호에 의해 조선 총독부시대의 한국인의 정치개혁 시도를 금지하는 정치법처벌법, 공산당 활동 및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금지하는 치안 유지법, 치안 유지법 위반자의 관찰과 한국독립운동 혐의자를 감시하는 정치범 보호관찰령, 정치범의 감독 및 예비검속에 관한 예비검속법등이 폐지되었고 이들 법의 위반자를 다루는 고등경찰업무를 관장하는 경무국 보안과가 1945년 9월9일 폐지되었다.(최신우, 2013:164)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경찰의 패검 착용 등 위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1945년 11월8일 이를 폐지하였고 경찰봉을 착용하게 하였다.(최선우, 2008:165)

미군정 당국은 남한의 경찰권을 접수한 이후 본래의 경찰영역을 넘어서 비정상적 권한을 경찰관서의 관할에서 회수하여 다른 관서로 이관시켰는데 이른바 비경찰화(Entpolizeilichung)를 단행하였다.(신상준, 1997:204) 비경찰화 작용에는 위생업무의 이관, 경제경찰 업무의 이관, 소방업무의 이관, 출판물 등의 검열업무의 이관, 각종허가권의 이관 등을 타 기관에 이관시켰다.

3) 경찰교육기관의 정비

1945년 9월13일 미군정은 구 경찰관 강습소에서 신진경찰관 2,000여명을 모집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순경을 배출하였다. 11월 15일에는 조선경찰학교에서 각도에서 선발된 경사급 관리를 입교하는 등 경찰 간부 교육기관으로서 태동하였다.

1946년 2월1일에는 국립경찰학교를 개칭하여 간부급경찰관을 교육하였는데, 각 도 관구경찰청 소관하에 경찰학교를 병설하여 순경 및 경사교육을 실시하였다.

1946년 8월15일에는 국립경찰전문학교를 승격하여 경부부내에 교육국을 신설하였다.(경찰전문학교, 1956:43-47) 여자 경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1946년 5월15일 최초로 여자

경찰관을 채용하여 국립경찰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배출하였다. 7월1일에는 공안국 여자경찰과를 신설하였고, 1947년 2월 17일에는 수도권구 경찰청에 여자경찰서를 신설하였다. 여자경찰관은 14세미만의 여자나 일반 부녀자를 조사하는 임무가 있고 남자 경찰관은 부녀자들의 신체수색을 금지하였다. (서기영, 1981:345)

2. 부정적 기능

1) 일제경찰 재임용

일제 강점기 경찰의 학정에 시달려 온 일반 국민들은 경찰관에 대하여 우호적일 수 없었고 일제하의 한국경찰관들은 일제에 협력하여 민족을 탄압하여 민족의 반역자로 몰려 전국 각처에서 집단폭행, 구타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여, 대부분 다른 지방으로 은신하는가 하면 공포속에서 구명에 급급하였다고 한다(한국경찰사:192)

해방 당시 총독부 조선인 경찰관의 수는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2만명 중 대략 8천여 명이었는데 이들은 해방이 되자 대부분 도피하여-미군정의 기존 행정체제 인정(포고문 1호)으로 대부분 10월 중순까지 복귀하게 되지만-출근율이 20퍼센트도 안되었다.(내무부 치안국,1971:951) 또 해방 직후 일본제국주의 지배의 최선봉에서 자기 민족을 억압하였던 친일 경찰들에 대한 보복이 극심하였는바 피살과 폭행사건의 대부분이 친일경찰에 대한 것이었다.(브루스커밍스:357)

표4-1 해방당시 총독부의 경찰규모

직 급	경 시	경 부	경 부 보	순사	합 계
한 국 인	8	75	172	7,758	7,968
일 본 인	77	482	882	13,307	14,747

출처:안진.(2011), “미군정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3,한길사,198면 재인용

총독부의 조선인 경찰관들은 식민지 지배의 직접적인 대행자로서 독립운동탄압의 제일선에서 민족의 독립을 방해한 반민족행위자들의 전형적인 집단이었으며 경찰기술 관료로서 탁월한 통제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군정경찰은 이들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냉전하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자신들을 새로운 애국자로 변신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1946년 1월에는 군정청 각 국의 장이 한국인으로 대체되면서 한민당의 주요 창립인인 조병옥과 장택상이 경무국장과 수도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군정경찰의 새로운 간부 층원¹⁾은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여전히 악명 높은 친일경찰들을 핵심

1) 1946년 1월 경찰간부들의 반탁운동으로 공식이 된 서울시내 8개 경찰서장도 전원 친일경찰들로 충원되었다.

적인 위치에 앉았다.

군정경찰의 이러한 충원방식에 대해 ‘경무국은 부패했으며 인민의 적’ 이라고 우려하고 독립운동가를 경무국에 등용할 것을 주장했던 경찰간부는 최능진 단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조병옥 경무부장에 의해 축출되었다.(브루스 커밍스:222)

표4-2 1946년 현재 군정경찰에 재직중인 친일경찰의 분포

직 위	1946년 총수	식민경찰 출신	비율(%)
치안감	1	1	100
청장	8	5	63
국장	10	8	80
총경	30	25	83
경감	139	104	75
경위	969	806	83

자료출처 : 군정경찰의 책임자 윌리엄 마글린이 1946년 10월26일 한미공동회담에서 발표한 자료. 한국경찰사,210면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정경찰 간부의 충원은 전체 간부의 80퍼센트 이상이 친일경찰에 의해 이루어졌는데,(표4-2 참조) 이 때문에 군정경찰은 한국 민중의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미 군정측에서도 10월 항쟁 후 친일경찰 및 친일관료의 등용이 군정에 대한 비난과 저항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혁명세력 및 좌익세력에 대한 억압이라는 군정경찰의 본질적인 기능에 비추어볼 때 문제의 해결은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었다.(안진:201)

2) 경찰의 과잉적 진압과 정치과오 사례

(1)대구 10월 사건

미군정은 1946년 초부터 국방경비대, 경찰 등을 창설하거나 강화하였는데 이는 좌익층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발로 조선공산당(후에 남조선노동당)은 쟁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46년 9월의 총파업과 여기서 경찰의 민간인 발포로 우발적으로 터진 대구 10.1 사건이었다. 그러나 쟁의가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탄압 또한 격화되었으며, ‘정책의 역전’ 이후 좌익층은 지하로 들어가거나 월북하게 되었다.(앤하위키미러,2013)

1946년 미 군정은 식량난을 해결한다며 농촌의 쌀을 강제로 징수하는 ‘미곡 수집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혈값에 사들이는 것이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컸다. 경찰은 쌀을 거두려 집을 뒤졌고, 이에 항의해 그해 10월 1일 7500여 명의 주민이 대구역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곧 전국으로 번졌다. 경찰이 시위대에 직접 발포하거나 주동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구·경북에서만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2013)²⁾

10월 항쟁은 미군정이 등용한 친일관료층에 대한 저항이 가장 대규모로 일어난 경우이다. 1946년 10월 1일 대구인민위원회와 대구시 공산당의 조직에 의해 일반시민들이 식량배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여기에 파업노동자들이 합세하자 무장경찰이 동원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10.1 대구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와 폭동은 경찰관서와 각급 지방행정기관을 표적으로 하였는데, 10월 25일까지 75명의 경찰이 사망하고 200명 내지 300명이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사망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원인이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한국 민중을 직접 억압한 친일경찰관의 온존에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안진:203)

(2)제주 4.3사건

제주 4·3 사건 또는 제주 4·3 항쟁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중봉기로서 미군정기때 군인과 경찰들(대한민국 정부수립이 후에는 국군), 극우 반공단체들의 유혈진압을 통해 3만여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1948년 당시 제주도 지역에는 식량난과 전염병 등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일제 때보다 심각해진 미군정의 실정과 비리, 그리고 미군정과 우파 청년단, 경찰조직 등이 주도한 좌파 세력과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고문, 탄압 등이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군정이 식량난에 시달리던 제주도민들에게 쌀을 몰수하는 “미곡수집정책”을 실시하자 제주도 민중의 광범위한 저항과 투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4·3사건의 발생은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는데 희생자측은 주민희생의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정부측은 주민희생의 원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희생자 주민측은 4·3사건이야말로 당시 미군정 및 경찰공권력의 탄압에 저항한 민중항쟁이며 주민봉기이고, 양민학살이라는 주장이고, 정부측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정부수립을 반대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선전포고 행위의 반란이며, 과잉진압으로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신고된 희생자 수만 1만 4천여 명이라고 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까지 따지면 3만 명 정도로, 대략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사

- 2)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김모씨 등 ‘대구 10월 사건’ 사망 희생자 5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명의 유족들에게 총 4억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인 배상 내역은 희생자 1인당 8000만원, 그 배우자에게 4000만원, 부모·자녀에게 각 800만원, 형제·자매는 400만원씩이다. 나머지 희생자 2명의 유족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과 관련해 국가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미 군정 때 일어난 일을 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48년 8월 11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미군점령군대 철수에 관한 협정’ 등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과도기 정부 때 발생한 지휘 책임을 인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수립 후 미 군정의 모든 것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또 “충격을 가한 경찰은 여전히 현재도 같은 기구가 국가기관으로 존속하고 있는 만큼 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경북 문경 양민학살(49년)이나 경남 거창 양민학살(51년)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일어난 사건을 놓고 배상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으나 정부 수립 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중앙일보,2013)

망하였다고 한다.(홍원민,2013)

(3)선거개입

1948년 8월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했다. 이에 앞서 남북협상의 실패로 남북한 총선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5월10일 유엔 감시하에 남한 단독의 총선거가 실시돼 제헌국회를 구성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7월20일 제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에 선출돼 24일 취임선서를 했다. 5.10총선은 김구, 김규식 씨 등 한독당과 민련계가 불참하고 공산계열의 방해가 치열했으나 유권자의 95%가 투표에 참여했다. (연합뉴스,1995) 미군정과 연계된 이승만-한민당 세력은 차후 권력을 장악하기위해 경찰력을 필요로 하였고 경찰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보호와 장래를 위해 이들과 유착 결탁하였다. 1946년 11월 과도입법의원 선거의 개입과 1948년 5월 10일 총선의 경찰개입은 한국 경찰사에 커다란 오점과 부정부패를 남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안진:201)

당시 이승만은 관권, 경찰력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일제 경찰출신은 자신들의 미래의 안전과 보호막을 위해 적극 개입하였다. 그 뒤 경찰은 3.15부정선거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통령의 중앙경찰권을 오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 미군정기 경찰의 평가

지금까지 미군정기 정부조직과 경찰조직의 성립과 공과를 살펴보았다. 미군정기 당시 법·제도적 측면이나 경찰이념은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먼저, 미군정시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활동을 위한 기초법제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친일 경찰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미군정 당국의 노력으로 고등경찰이나 경찰의 사법권을 폐지하고 여자경찰 신설, 서장의 즉결처분권이나 훈방권의 사법기관 이관, 위생사무 출판검열 등 비경찰화 작업을 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가경찰권을 확립하려는 노력과 정비라든지 6인의 중앙 경찰위원회 신설 같은 민주적 요소의 도입도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 봉사경찰로서의 경찰역할이라든지 국민의 권리와 인권존중의 치안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점은 비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군정 공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역사학자나 정치학자의 의견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념적 화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는 남한에서 좌익조직들이 쇠퇴하게 된 주된 요인을 국립경찰의 우월한 조직적 및 기술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경찰의 사명은 다른 민주 경찰국가들처럼 평화를 수호하고 소극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의 정세하에서는 이런 소극적인 치안유지책으로는 공산분자들의 살인, 파괴 및 게릴라전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경찰은 무기를 들고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보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싸웠다고 본다.(브루스커밍스:21-225)

미군정 경찰의 민중봉기 진압의 부정적 시각은 정부측보다는 사건을 일으키고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한 남로당측에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남로당편에 있던 희생자측이 그 책임을 이어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경찰은 질서 문란자와 공산주의자 등을 검거하고 심문을 하였는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정부가 반대세력인 공산주의자를 검거하여 심문하는 것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주민탄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나종삼,2013)

그러나 미군정의 좌익과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권 이용은 주민의 희생이 너무 컸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결국 미군정 당시 경찰권 활동의 어두운 경찰 부패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치유하여야 하는가가 경찰의 새로운 과제라 본다.

참고문헌

- 강혜경.(2002),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14면.
- 경찰전문학교.(1956),「경찰교육사」,청구출판사,43면-47면.
- 경찰사편찬위원회.(1995),「경찰50년사」,경찰청,17-18면.
- 김기협.(2013), 미군정이 물려준 최대의 유산, 경찰, 「해방일기 1948년」 8월 9일
- 김성수 외(2002),「한국경찰사」,경찰대학
- 김창윤.(2009), 한국과 일본의 미군정기 치안정책 비교연구,「경찰학연구」,제9권 2호, 경찰대학,39면.
- 내무부 치안국.(1971),「한국경찰사」, 951면.
- 나종삼.(2013), 「제주4·3 화해와 상생 토론회 발제보고서」,3.27
- 브루스 커밍스.김자동역(2001),「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225면.
- 신상준.(1997),「미군정기 남한행정체제」,한국복지행정연구소,290면.
- 서주석.(1996), 「한국의 국가체제 형성과정」,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백.(1990),「한국사신론」,일조각,8면.
- 안진.(2011), “미군정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3」,한길사,205-206면.
- 유종해·김택(2008),「한국행정사」,한국학술정보,331-340면.
- 최선우.(2013),「경찰학」, 그린출판사, 164면.
- 총무처.(1980),「대한민국 정부조직 변천사」,89-90면.
- 한국어 위키백과.(2013), 한국의 군정기, 「백과사전 앤하위키미러」
- 홍원민.(2013), 미군정과 한국 정부가 행한 끔찍한 학살과 저항, 「레프트21」 101호 , 04-01
- 경향신문(1948), 8월 8일 "급격한 변동 없다-경찰권 이양에 경무부 안을 기초, 8월 8일
- 서울신문.(1948), 8월15일
- 중앙일보.(2013),11월04일
- 연합뉴스.(1995), 광복50년특집:50대뉴스,8월 10일
- Instructuions to Prosecutors No. 3, HQ USAFIK,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Bureau of Justice ,29, December 1945.

투고일자 : 2014. 12. 01

수정일자 : 2014. 12. 26

게재일자 : 2014. 12. 31

국문초록

한국 부패사 연구: 해방 후 미군정 시기 통치기구 형성과 경찰 활동의 功·過를 중심

김 태(중원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해방 후 미군정기 한국정부의 형성과정과 경찰활동의 부패사와 공과를 고찰한 논문이다. 우리나라는 45년 해방과 더불어 제국주의적 일제 경찰제도를 벗어나는 계기를 맞이하는 시대였지만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일제경찰의 잔재가 그대로 계수되었고 그 후 남북분단의 고착화, 냉전체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그 잔재가 투영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군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국경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경찰이념의 전통은 사라지고 또다시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는 사실이 경찰사의 오점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군정기 시 한국통치 기구의 성립과정을 고찰하고자 하며 또한 경찰의 성립과 활동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군정기 경찰부패사 활동을 통해 바른 경찰사 정립을 위한 역사적 사실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 미군정기 정부성립과 활동을 고증하고 ii) 미군정시기 경찰의 부정적 활동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iii) 경찰의 치안활동 및 정치적 예측화 문제점을 평가하고, iv) 오늘날 국립경찰, 민주경찰로서의 한국경찰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도출한다.

본 논문은 해방 후 정국상황에서 한국정부형성과정과 경찰활동의 사실과 행위 등을 살펴보고 연구함으로써 한국경찰 부패사의 역사적 평가를 조명하고 인식하는 단초가 된다고 본다.

주제어: 한국정부, 미군정기, 경찰활동, 부정적인 요소, 경찰부패사